‘학종’은 안갯속 전형… “합격·불합격 근거 밝혀라”

〈학생부종합전형〉

신뢰성·공정성 핵심문제 지적
“합불 분석 자료 있어야” 강조
서류 평가 기준도 추상적 ‘문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전형 방식의 불명확성과 입시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안갯속 전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학종 전형 결과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과 학종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교육부가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8일 오후 서울교대에서 개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학종은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시작된 지난 10여년 전 도입때부터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전형으로 평가받았지만, 신뢰성과 공정성이 제도의 명운을 가를 핵심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까지도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등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학종 도입 이후 학교 교실에서 토론식 수업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교나 지역에 따라, 혹은 부모 경제력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문제와 전형 방식의 불투명성, 학종 전형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휘문고 우창영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를 배정받는 순간 ‘이 학교는 학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고, ‘학종은 선수와 코치가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경기’라고 언급하고 ”훌륭한 코치를 만나지 않으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학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산강서고 조진태 교사는 학종의 합·불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이 학종 선발 과정과 결과를 매년 발표하도록 학종 결과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사는 ”대학의 인재상이 1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인지, 지원하는 수험생이 바뀌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합불 예측이 힘들다“면서 ”대학에서 인재 선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종 과정과 결과도 매년 발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험생들의 학생부 등 서류가 대동소이해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3배수안의 학생들의 서류상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학생부를 ‘활동관찰 후 기록’과 ‘평가’로 분할하는 양식으로 개선해 대학이 정성적 판단과 함께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해고 박재현 교사도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떨어진 이유를 고등학교에 공유하는 대학은 극히 일부“라면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평가 결과를 설명해줘야 한다. 설명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류평가점수라도 알려줘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교육대에 합격했다는 김모 군은 ”학종은 교과성적이 낮은 제게 기회를 준 전형이고, 부담은 있었지만 저를 성장하게 해 줬다“면서도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학종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해 유불리가 나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군은 ”특히 학종을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맞춰야하는게 힘들었다“면서 ”학종에서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경제력의 영향력이 기존 전형보다 떨어지는 전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4~6등급대 중위권 수험생들을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진태 교사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4~6등급대 학생들은 1,2학년때 희망을 갖고 진로에 따라 학종을 준비하지만, 3학년이 되면 내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절망한 뒤 불확실한 학종 대신 교과전형으로 선회해 지원하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대학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종 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성모여고 3학년 박 모 양은 ”학종에 대한 대학이 공개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아 학생들이 평가기준을 알기 어렵다“면서 ”학종의 필수요소인 학생부 기록도 학생들이 적어온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등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딸을 둔 학부모 강봉근 씨는 ”대다수 학부모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위해 공교육 대신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찾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육청이 대학들과 연계한 보다 상세한 설명회를 열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들도 학종 선발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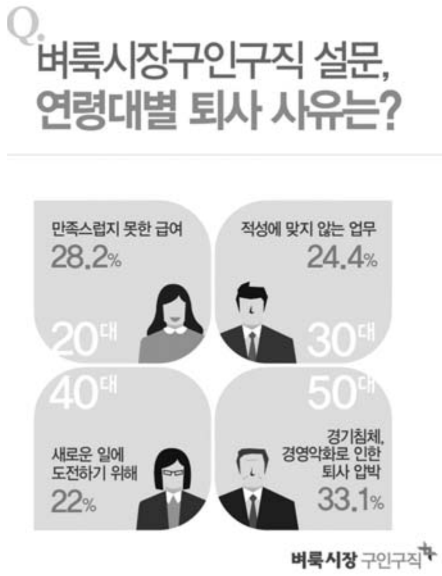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진행된 대입정책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중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4차 대입정책포럼을 이달 말 개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장인 퇴사사유 연령대별 달라

20대 “급여때문에” 50대 “경영 악화 등 압박”

미디어윌 남녀630명 설문조사 결과
구직활동 기간은 ‘3개월’ 가장 많아



직장인들의 퇴사 사유가 연령대별로 달랐다. 20~30대는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퇴사 압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8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을 운영하는 미디어윌이 퇴사 경험이 있는 남녀 6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대의 퇴사 사유는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28.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9%),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9.7%) 등으로 조사됐다.

30대의 경우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24.4%)라는 이유가 1순위로 꼽혔다.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7.4%),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1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해 퇴사한 30대의 경우 여성이 88.6%로 압도적이었다.

40대와 50대 이상부터는 타의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2%) 퇴사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8.3%) 퇴사 압박을 받아서(17.7%)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이상 응답자는 경기침체,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압박(33.1%)이 퇴사 사유 1순위였고,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어서(23.8%), 휴식이 필요해서(21.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직장인들은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구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2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도 8.1%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hys@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8일 전했다. 사진은 후암동 골목길에서 재생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좁고 어두운 골목길,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서울시가 좁고, 어둡고, 위험한 서울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가 골목길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 이내의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 재생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이다.

재생사업의 핵심은 골목길의 ▲역사문화적 숨길을 보존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일부 폐가를 활용해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 활성화와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같은 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착수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3월께 마무리하고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6월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시는 우선 용산구와 성북구 2곳 골목길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각 지역별로 주민, 자치구,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 주민설명회, 심층면접, 객관적인 실태분석 등을 거쳐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같이 도시개발에서 제외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들을 재생해서 슬럼화 되는 것을 막고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도 3월 개최한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목길이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왔다. 이에 법령개선 등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골목길이 장터이자 놀이터이고 쉼터이자 주거공간인 모로코의 도시 페스처럼 서울의 골목길도 자연지형, 역사와 문화, 시민의 흥미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촉매제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사람인HR, 잡코리아에 120억 합의금 지급

‘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종지부

사람인에이치알이 ‘채용공고 무단복제’ 소송 합의금으로 잡코리아에 12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로써 불법 웹크롤링 행위를 두고 10여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구인구직사이트를 대표하는 두 업체간 갈등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사람인 웹사이트에 공고했다.

사람인은 “사람인에이치알은 경쟁사 잡코리아 채용 정보 소스코드를 기계적으로 복제해 취득한 후 이를 가공해 사람인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복제와 게재 행위를 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잡코리아와 사람인에이치알은 관련 민사·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사람인에이치알은 지난 2008년부터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 복제해 게시해왔으며, 수 차례의 합의와 법원 조정과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해왔다.

양 사 소송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잡코리아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한용수 기자

“스마트팜 도전하세요”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

정부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달 9일부터 3월 16일까지 제1기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농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에 걸쳐 전 과정을 교육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